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박근혜 정부가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개약안이 통과되면 재직공무원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 덜 받고 최대 65세까지 더 늦게 받게 된다. 삭감되는 연금을 모두 더하면 두 자녀의 4년치 대학 등록금 정도 되는 돈을 빼앗기는 셈이다.

2015년 이후 신규자의 경우 연금수익비가 1~1.13으로 어지간한 예금 이자보다도 낮아진다. 연금 포기하고 적금 붓겠다는 얘기가 나올 판이다. 비열하게도 정부는 2010년 개악 때처럼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차별해 분열시키려 한다.

연금액을 매년 물가인상률보다 낮게 인상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추가했다.

이런 개약으로 2016~2027년 기간에만 총 47.7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한다.

임금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다.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연금을 삭감하는 자들이 임금을 올려 주려 하겠는가.

새누리당은 '하후상박' 개혁이라며 크게 인심이라도 쓴 듯이 생색을 냈다. 연금 수령액을 정할 때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부든 하부든 모두 연금이 삭감되는 '하박상박'일 뿐이다. 매달 1백만 원씩 삭감되는 사람들 중에는 고위직 뿐 아니라 교사와 연구직·계약직 공무원도 다수 포함된다.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수령액을 깎겠지만 그 돈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가지도 않는다. 새누리당이 '하후상박'을 말하려면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 차별부터 철회해야 마땅하다.



## 재정 적자 때문에 삭감? 부자에게 세금을!

정부는 공무원연금 때문에 매년 2조~3조 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며 조만간 국가 재정이 파탄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기업주·부자 들에게 연간 수십조 원의 감세 혜택을 주는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 1백만 명의 노후를 위해 쓸 돈이 없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한국 정부의 공무원연금 지출은 OECD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독일 공무원연금의 경우 노동자가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이명박 정부 때 기업주·부자 들에게 깎아 준 세금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 애초 감세의 명분이었던 투자는 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이 사내유보금으로 쌓

아둔 돈만 무려 1천조 원에 달한다.

그 돈의 일부만 징수해도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모두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는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 기초연금도 대폭 인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노인들은 생계비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정부는 군사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한국은 군사비 지출이 세계 10위다. 무기 수입은 세계 8위다. 노인 빈곤률과 자살율은 1위다.

정부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군사비가 아닌 복지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한다면 공무원이든 민간 부문이든 평범한 대다수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

## 진정한 철밥통은 따로 있다!

- 2014년 현재 이명박, 김영삼 등 전임 대통령은 매달 1,554만 8천 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 국무총리 정홍원은 2004년에 퇴임하면서 매달 4백28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았다.(당시 평균은 1백79만 원) 2006년에는 민간 기업에서 월급 3천만 원을 받으면서도 매달 연금으로 2백35만 원씩 받아갔다.
- 국회의원들은 4년 동안 연봉 1억 4천여만 원에 온갖 특혜와 부수입을 얻고도 해마다 스스로 연봉을 올린다.
- 일반직 공무원 임금 : 민간 기업 대비 77.6퍼센트. 반면, 5급 입직 고위 공무원들은 민간 부문보다 생애 임금이 3억 원 이상 많다.
- '퇴직 공무원의 평균 사망 연령'은 고위직인 정무직이 72.9세인데 반해 지방 일반직은 61.1세였다. 소방공무원은 그보다 낮은 58.8세에 불과했다.(2008년 공무원연금공단)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상향평준화가 대안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국민연금이 열악한데, 공무원들만 특혜를 누리느냐'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삭감을 추진하는 자들은 그동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누더기로 만들어 온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먼저 부실하게 만들어 놓

고, 그것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도 낮추라고 말한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액수 차이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너무나 열악해 노후 소득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진정 정부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다면 공무원연금을 삭감하지 말고, 공적 연금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 위기, 연금 개악, 그리고 저항**

새로 나왔습니다!

**경제 위기, 연금 개악, 그리고 저항**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악의 쟁점과 투쟁의 과정

박천석·최미진·장호중 지음, 노동자연대, 84쪽, 3,500원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 20권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해 드립니다.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려면

# “총파업 및 총력투쟁 논의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2014년 7월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정부는 역대 최악의 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개악안을 ‘연내 처리’하려고 의원입법 발의까지 동원했다. 경제 악화 전망 때문에 여유가 없는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 내의 이견까지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정도로 강경하다.

이런 강경한 공세를 저지하려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우선 ‘철밥통 이기주의’ 이데올로기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특혜를 누리는 게 없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노후를 누리려면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

진보진영 내에서 여러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고액 연금 노동자 양보론’ 등이 나오고 있지만, 우선 당면한 개악에 일관되고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교사 노동자도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리 운동 내에 파고드는 것을 막기 어렵다.

노조 활동가들은 정부와 언론의 이

간질과 왜곡에 맞서 조합원 교육, 간담회, 홍보전 등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북돋고 연대를 확산해야 한다.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를 멈추려면 노동조합도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올해 7월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을 전지부 총회를 개최해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논의한다고 결정했다. 법안이 이미 발의된 만큼, 이 결정을 실행해야 한다.

올해 초 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60퍼센트는 ‘총파업 또는 연가파업’을 하거나 참가하겠다고 답했다. 2004년 파업으로 많은 공무원 노동자가 해고됐고 지금도 파업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답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 연금을 지키려면 집회만으로 부족하다는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파업으로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막아

낸 저력이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투쟁이 성과를 얻는다면 조직적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승리의 경험은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신감을 높여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 사회적 협의회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사회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일방적 개악 추진을 비판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와 노조 무시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일방성’도 문제지만, 핵심은 엄청난 삭감을 담고 있는 개악안 내용 그 자체다. 따라서 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의지를 단호한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와 협상은 투쟁의 결과물일 때 우리 편에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공

무원노조는 투쟁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 법 개악을 저지할 힘은 국회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

실사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투쟁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으면 연금 개악을 막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 그 동안 지배자들은 사회적 협의회를 노동계급에게 양보를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했다.

공무원노조도 2008년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했지만, 발전위원회는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해 결국 ‘더 내고 덜 받는다’ 개악안에 노조가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당시 개악으로 신규 공무원들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됐다.

게다가 사회적 협의회에 들어올 새 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분명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 “연내 처리”에 반대할 뿐,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사회적 협의회 구성에 큰 기대를 걸고 의존하기보다는 단호한 투쟁을 건설하는 데 중점을 뒤야 한다.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정부는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비난을 퍼붓고 ‘철밥통 이기주의’라며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려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투자 삭감,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공격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속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와 공공성, 복지는 재정 건전성 논리 따위에 밀려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추가

개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공격이 전체 공공부문 공격·공적 연금 무너뜨리기와 연결된 공세임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운동이 공공서비스 방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방어와 공공성 방어를 결합시켜야 한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삭감될 때 행정서비스

와 교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실제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공공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당장,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로 민영화,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

제 등을 추진하려 한다.

셋째,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하는 데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 사회적 연금 활성화 대책 폐기에도 앞장서야 한다.

공무원연금 지키기는 단지 공무원 노동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다. 민주노총과 산하 주요 노조들도 지금 신자유주의 공세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공무원모임·교사모임과 함께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함께 토론하고 행동합시다**

노동자연대 공무원모임과 교사모임은 현장에서 연금 개악에 맞서 투쟁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투쟁 경험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뜻있는 조합원들의 연락을 환영합니다.

공무원모임 연락간사 : 박천석 (010-2942-3791)  
교사모임 책임간사 : 조수진 (010-3629-7256)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wspaper.org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15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5**

일시 : 2015년 2월 6일(금) ~ 2월 8일(일)

장소 : 서울  
주최 : 노동자연대  
웹사이트 : www.marxism.or.kr